

해외 선진 수산국에서 얻은 경험이 우리 수산정책에 기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하는 교과서 집필 지침서를 일본정부가 내림으로써 촉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중등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수록됨과 동시에 머지않아 고등교과서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과거와 같은 '조용한 외교' 대신에 '영토 수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독도 유인화 대책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독도에 머물거나 자주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업인 숙소, 정주 마을, 종합해양기지 건설과 함께 관광관련 시설물 및 상품개발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수산국이다. 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이에 관한 나름대로의 효용성에 대한 깊고 치밀한 연구 검토가 있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이 없잖다.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독도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런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파제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꼭 독도 영유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1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를 해마다 개최해 왔다. 또한 22차례에 걸쳐 해외선진어촌어항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한일어촌어항기술회의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으며, 해외선진어촌어항조사단은 지난 6월12일부터 9박10일간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왔다.

한일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는 한일 양국의 어촌어항어장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과 함께 기술교류협력 및 양국 수산관계자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돼 왔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는 수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력의 편차를 좀 좁혀 보겠다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서 말한 방파제 선착장 문제라면 이미 협회가 상당 수준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회의에서 우리측은 '해양환경정화가 수산자원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어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고, 일본측에서는 '제2차 어항어장 정비 장기계획에 관하여'와 '어항의 생산유통의 효율화와 위생 관리의 고도화에 의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해외선진어촌어항조사단 파견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할 때 합법적인 해외관광이 목적이 아니냐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설사 그게 사실이었다 치더라도 오늘날 바다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한가? 바다를 소재로 한 관광산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협회가 오히려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과도 결코 만만치 않다. 어쩌면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수산업에 관한 우리의 시야가 이로 인하여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옛말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그대로 증명된 것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착잡해지는 것은 우리는 왜 항상 뒷북을 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준비 부족 탓이다. 일본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은 10년, 20년 단위로 수십 년째 진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 임기응변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함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독도 영유권 사태를 보면서 협회와 우리 어항인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남이사 알아주든 말든 그 동안 우리는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우리의 소임을 묵묵히 다해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만들어 놓은 한일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의 성과물과 해외선진어촌어항조사단 파견으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은 앞으로 전개될 각종 해양수산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자료와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어야 이번 독도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 기다렸다는 듯이 타당하면서도 합리적인 우리의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